

野, 반기문 '영입 → 공격 대상' 전환

한 때 '노무현 DNA'라며 영입 주장... 여당 행 유력해지자 '유엔 결의안 위반' 논리까지 끌어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자 야당은 일제히 견제에 나섰다. 야권은 한 때 반 총장을 '노무현 DNA'라며 영입 주장까지 했지만 반 총장이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논리까지 끌어들이었다.

아무래도 반 총장이 새누리당 친박계 등의 후원을 등에 업고 여당행을 택할 것으로 여겨지자 '영입 대상'로 추앙하던 분위기가 공격 대상으로 전환한 것이다.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던 반 총장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만들기 위해 백방 노력했다. 그런 점에서 반 총장은 대망론이 뜰 때마다 야권의 러브콜을 받았다. 반 총장은 '노무현 사립'이란 논리였다.

야권의 '반기문 러브콜'은 반 총장 집권 1기부터 시작했다. 박지원 당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10년 언론 인터뷰에서 반 총장 영입을 시사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3년 반 총장에 대해 "대선 후보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극찬한 바 있다.

권오갑 전 더민주 고문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과 오찬을 하며 반 총장을 차기 야권 대선주자 중 하나로 언급했고, 정대철 고문도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반 총장에게 당신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훌륭한 일 한 두 가지 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것 중에 하나"라면서 "혹시 정치를 한다면 야당에 오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전한 바 있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반 총장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낸 총장"이라며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다. (영입) 욕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 총장이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새누리당 쪽에 상대적으로



의장과 부의장 간의 인사 정희화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후 이석현 부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까워지자 야권의 '반기문 청산'은 흡집 내기로 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친박들이 (반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모시려 할 것이고 본인도 권력욕이 강한 분"이라며 '친박 프레임'을 썼었다. 정장선 더민주 총무본부장은 "경제 상황이 안 좋는데 너도나도 대선에 끼어드는 모습에 우려가 있다"며 "입기 중에 국내 정치의 중심에 끼어드는 것이 시기적으로 옳은가"라고 반문했다. "유엔 총회 결의안에도 정부 직책 수락을 삼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의 "입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와서 특정 정치 세력

과 연대해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태도가 옳은지,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지 (생각해보면)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더민주는 반 총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결시켜 출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안민석 의원은 "반 총장이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야 한다. 총장을 만든 장본인이 노 전 대통령에게 인간적 도리를 다 해야 한다"면서 "본인이 대권에 대한 의지가 있으니 이런 인간적 도리를 차마 못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더민주는 반 총장의 대선 출마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내세웠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여러 국가의 비

밀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데 특정 국가 공직자가 되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니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의문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5일 반 총장이 내년 대선에 나온다면 '유엔 결의안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유엔 결의안이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 총장 출마 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으며, 박영선 의원은 "역대 유엔 사무총장 7명의 퇴임 이후에 행적을 보면 대부분 4년 내지 5년의 기간을 쓴 다음에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국민의당 '꽃놀이패' 어떻게 쓸까?

과반수 미달 새누리·더민주,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에 협조요청 필수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가장 주목을 받는 정당은 단연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에서 122석과 123석으로 모두 절반에서 27~28석이 모자란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38석을 얻어 명실상부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1, 2당 어디든 현안에 대해 국민의당 협조를 받아야만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민의당이 소수의 의석에도 불구하고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 20대 국회의 '키'를 쥐게 된 셈이다.

20대 국회는 대통령 임기 말과 맞물리는 만큼, 정부여당은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국민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더민주의 더민주대로 제1당으로서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역시 국민의당과의 공조가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일단 더민주와 공조를 강화할 전망이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를 비롯해 국회법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문제, 어버이연합 불법 자금지원 의혹 등 당면한 현안이 대부분 야당끼리 공조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으면 서로 본격적인 야권 공조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당이 연정론을 꺼내들었다가 집안에서 급격한 지지를 하락을 겪었던 최 등을 고려하면 20대 국회 초반에는 국민의당이 더민주보다 더 '선명 야당' 모습을 강조할 공산도 크다.

국민의당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 사건에 대해 더민주보다 먼저 "20대 국회에서 특검 추진"을 밝힌 점도 이같은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대 국회 초반이 지나면서는 국민의당이 여당과 공조하는 모습도 점차

보여줄 것으로 점쳐진다. 국민의당 창당 동력의 상당 부분이 2017년 대선과 무관치 않은 만큼, 중도·보수 지지층으로의 세 확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울러 지나치게 야당과의 공조만 강화하며 야당을 내세울 경우, 더민주와 사실상 차별점이 없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국민의당 역시 이같은 점을 감안, 지도부와 당 핵심 인사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정책을 주도한다, 단순한 캐스팅보트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언론에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의 공조에 나설 경우 국민의당은 매 현안마다 호남권에서의 지지를 하려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울러 현안마다 제기될 당내 호남 의원들의 반발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이같은 점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 20대 국회의 '황금분할 3당' 체제를 마냥 꽃놀이패로 여길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성주 기자

문건위, 생활체육 대축전 전북선수단 격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식에 참석해 전북선수단을 격려했다.

전북선수단은 33개 종목, 1,010명이 검도와 게이트볼 등 31개 정식종목 및 빙상, 줄다리기 등 2개 시범종목에 출전했다.

이번 대회 입장식에서는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마스코트인 '태리', '아랑'의 발차기 동작 풍선 퍼포먼스와 다양한 축포 및 연무분사 등을 연출, 눈길을 끌었다.

문건위원들은 도내 선수들을 만나 "생활체육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활력소"라며 "그동안 같고 닳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일원에서 펼쳐지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4개 종목에 총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자웅을 겨뤘다. /고민형 기자

국회법개정안 거부권에 폐기여부 공방

여야가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에 따른 법안의 폐기 및 재의결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의 요구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됐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20대 국회로 자동 이월돼 여기서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주장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고 "지난번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수석 부대표들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전격적으로 상정해서 처리를 유도했던 것이고 정부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의 요구한 것"이라며 "그 재의 요구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을 시도하겠다는데 이미 거부권이 행사돼 오늘 종료로 국회에 (재의요구서)접수되면 19대에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법률안에 불과하다"며 "다른 법률안들이 헌법 51조에 따라 임기만료 시 자동 폐기되듯이 이 법률안도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18대 국회까지 63건이 재의 요구됐고 그 중 9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야당이 20대 국회 시작부터 재의결을 하겠다는 것은 법리논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이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일이므로 해석에 이견 있을 수 있다. 한쪽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기 때문에 19대 국회 내 재의결을 안 하면 폐기된 것으로 본다. 다른쪽은 법안의 연속성 측면에서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처리 못한 것의 귀책사유가 19대 국회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야 3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박원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재의 요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본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권한남용"이라며 "그래서 이 법은 폐기가 아니라 사실상 공포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취재진과 만나 "자동 폐기는 아니다"라며 "17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이 18대에서 17건 공포됐고 18대 국회에서 19대 국회로 넘어가 공포된 사례가 있다. 자문 받은 헌법학자들이나 법률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임기 직전에 재의요구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폐기 운운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 헌법의 규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헌법 질서에 대한 비겁하고 유치한 확대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주 기자

정의당 '대통령이 협치 정신 내팽개쳐'

정의당은 2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와 관련, "20대 국회가 막 발걸음을 떼려는 이 때,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협치의 정신을 내팽개쳤다"며 정부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속고 거친 법안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상시 청문회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를 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의 산적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다. 이를 거부하는 정부야말로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주 기자

노회찬 '대통령의 협치는 '협박하는 정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는 서로 '협박하는 정치', '협박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박하는 정치', '협박한 정치'로서의 협치의 길을 걷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직격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협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의결과 관련 "거부권 행사는 곧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재량적 대통령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주 기자

"부패·반혁신적 인사가 비대위원장?" 비박계 '냉소'

새누리당 배신을 이룰 혁신적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희호 전 정 부총리차관비서관에 대해 비박계는 "부패 인사가 당 혁신을 이끌 수 있겠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뛰어난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도 상당수였다.

서울 지역 한 비박계 의원은 27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알아보니 아들 교수 임용과 관련 문제가 있었던 사람 아니냐"며 "그냥 의혹이 아니라 임용 취소 판결이 났던데, 그럼 부패인사 아닌가"라고 비교했다.

그는 "부패한 반혁신적 인사가 무슨 당의 혁신을 이끌겠냐"며 "전날 기자회견을 보니 총선 참패 원인, 당 상황 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데 비대위원장이라니, 정말 당의 꼴이 말이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또다른 비박계 중진 의원은 "이번에 처음 들었다. 잘 모르는 사람"이라며 "친박계 추천 인사가 비대위원장이 된 것인데, 좀 불쾌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 사정도 전혀 모르던데, 그냥 친박 오더대로 움직일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 아니냐"고 쓴소리를 했다.

수도권의 한 비박계 중진 의원은 "분당이나 안 시키고 유지하는 정도도 기대하는 것 아니냐"며 "(김 내정자로는) 혁신은 어렵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당초 비박계 위주의 비대위-혁신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계의 조직 반발로 전국위 무산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김 내정자는 친박계 추천 인사로 알려져 이같은 반발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 대회까지 총선 참패로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을 수습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 혁신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이성주 기자